

현황

해체계획서 작성(관리자)

해체계획서 검토(전문가)

해체허가(허가권자)

해체감리자 지정(허가권자)

공사실시 및 점검 실시

관계자 처벌

-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(시공자)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부재
- 감리자 업무태만 등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음(과태료 500백만원)

지역건축안전센터
(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의무 설치)

개선

[강화] 해체계획서 작성(전문가) [신설] 작성자 자격기준 부여

[신고대상만 적용] 해체계획서 검토(전문가)

[신설] 해체심의 및 해체허가(허가권자) [신설] 지방 심의위원회 심의 추가

[강화] 해체감리자 지정(허가권자) [신설] 상주감리제도 도입

[신설] 착공신고(관리자) [신설] 해체감리자 계약여부 등 확인

[강화] 공사실시 및 점검실시 [신설] 허가권자 점검권한 강화

관계자 처벌

-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는 “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벌금” 처벌 신설
- 해체감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 2천만원으로 상향

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
(필요 소요, 지자체 여건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설치 확대 추진)

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주요내용

1.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

주요과제	현황	개선
해체계획서 작성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작성능력이 부족한 관리자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전문가는 검토만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문가(건축사, 기술사)가 해체계획서 직접 작성
해체허가 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개층 이상, 연면적 500m²이상, 높이 12미터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개층 이상, 연면적 500m²이상, 높이 12미터 이상 + 공사장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
해체심의제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체허가 단계에서 해체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 미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체허가 단계에서 지방 건축위원회의 해체계획서 등 적정성 심의 의무
상주감리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주감리 의무적용 대상 기준 부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체허가 대상은 상주 감리원 배치 의무
착공신고 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착공신고 제도 부재로 실제 착수 여부 확인 곤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제 공사 착수 및 지정 감리와 계약 여부 등 착공신고제도 도입
변경허가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가사항 변경 시 행정 절차 부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체순서 변경 등 주요 허가사항 변경 시 변경 승인 의무

2.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

주요과제	현황	개선
지역건축안전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 의무설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센터 설치 확대 추진
해체공사 관계자 교육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감리자만 16시간 교육 권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감리자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시간 확대(16시간 → 35시간) 해체계획서 작성자, 허가권자에 대한 해체공사 관련 교육 실시
처벌기준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기준이 부재하거나 처벌수준이 낮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기준 신설 해체계획서 작성 부실 등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
안전점검 의무화 및 허가권자 권한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가권자가 필요시 현장점검을 수행 현장내 위반사항에 대한 허가권자 조치권한 부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가권자가 착공신고 수리시 해체공사 현장 안전수준 점검 의무화 현장내 위반사항 적발 시 공사중지 등 조치권한 강화

3.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 체계 구축

주요과제	현황	개선
안전점검 확대·유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자체의 자발적인 안전점검 유인이 부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안전대진단, 우기·해빙기 점검 시 해체공사장 점검 실시 지자체의 재난관리평가를 실시 및 결과를 공모사업 등의 평가요소로 활용
해체공사 위험사항 감시·안내체계 구축 및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들이 해체공사장 위험사항을 안내받거나 이를 신고·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 부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체공사 현장 위험요소 신고 및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(App)기능 강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해체공사장 안전정보를 대국민 공개